글로벌펀드 6개국서 총 13개 운용사 선정

중기청, 일반 10개 · AI 1개 · 기후테크 1개 · 세컨더리 1개 등 4개 분야… 최소 2700억원 한국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한성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4일 2025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13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74개 펀드, 총 12.3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증액, △AI,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공고(1월) 후 신청·접수(4월)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4~6월) 및 출자심의회(7월말)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시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전문성 및 한국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700억원을 출자하며, 펀드결성규모는 AI펀드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도 역대 최대규모인 2,700억원 이상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기간 내 미결성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결성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성숙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펀드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JB와 콕! 선물이 콕! 이벤트' 실시

전북은행, 법인 고객님께 드리는 푸짐한 경품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0월 31일까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JB와 콕(Cop)! 선물이 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6월 말 기준 전북은행 원화수신 잔액 및 평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법인 고객과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 매월 말일 잔액 및 월 평균잔액 5백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자동응모되며, 조건을 달성한 고객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전북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총 20명)을 지급한다.

더불어 이벤트 종료월 말일 잔액 및 이벤트 기간 평균잔액 5백만원 이상 유지 시 추첨을 통해 쿠잉 미니냉장고(총 6명) 또는 삼성 에어드레서(1명)를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법인 고객들이 전북은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인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개인정보보호 인증' 신규 취득… 3년 유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성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협회(OPA)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PLUS)를 신규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8년 7월 31일까지다.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는 홈페이지와 그 시스템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 준수 여부와 보호조치 이행 수준 등을 종합심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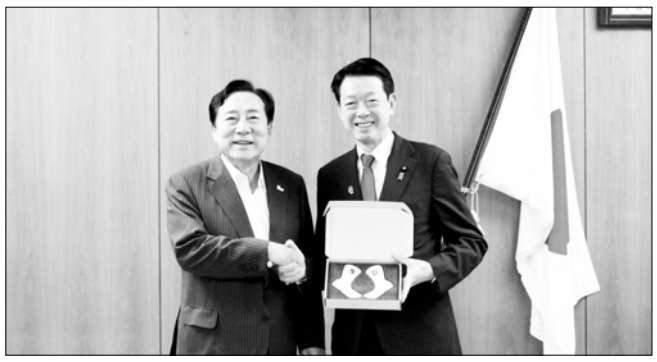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는 이번 인증에서 △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영역 60개 항목의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은 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려 안전한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韓 · 日 중소기업 민간교류 확대에 日 정부도 힘 실어

김기문 중앙회장, 日 무토 요지에 포럼 참여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회장 모리 히로시)와 올해 11월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일본 정부와 국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 100명, 일본 200명 등 양국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일 중소기업 포럼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단체는 한국의 ICT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세부 수요와 정책과제를 발굴해 '한일 중소기업 포럼'이 한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의 포럼 협약에 앞서서는 △무토 요지 경제산업성 대신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특별보좌관 등 일본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각각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제산업성 등도 포럼 취지에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포럼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이끌 예정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중소기업계가 공통으로 풀어나갈 현안을 선정,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기업투자 분야 총괄 전문가 채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제자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기업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기업투자 총괄 담당자로, 주요업무는 △기업투자 시장 조사 △국내외 PE, VC, PD, 인수금융 발굴 및 검토 등 투자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중소기업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7.29(화)부터 8.18(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지역금융 없이 지역균형발전 없다"

지노협, 지역은행 중심의 금융 생태계 강화 강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원호, 이하 지노협)가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 수십년 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미비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공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필수라는 것.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도 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고리"라고 설명했다.

지노협은 지역은행이 처한 이중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역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아파트 중도금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선 총량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챗GPT'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4일 전주상공회의소 6층 컴퓨터실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챗GPT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현구 교수(AI 융합 비즈니스 포럼 회장)가 강사로 나서 △ChatGPT와 생성형 AI의 개요 △다양한 생성 AI의 사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나만의 GPT 만들기 △비즈니스 적용 사례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